



고종조 기자

세월호 진실 규명은 박근혜가 끝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9월 27일 집회를 지지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자본》 코드 풀기

▶ 10~11 면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공격과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 16 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공회의
피케티
《21세기 자본》 비평

▶ 8~9 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전면적 의료 민영화

▶ 14~15 면

공무원연금 개악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의
내핍 강요 예산

▶ 6, 7 면

기성 체제의
환심을 사려는
박원순 서울시장

▶ 4~5 면

누구의 말일까요?

“미국 대통령들의 전통: 취임 선서, 백악관에서 애완동물 기르기, 그리고 이라크 폭격을 선언하는 대국민 연설”

영국 〈인디펜던트〉,

1991년 이래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이라크 폭격 대국민 연설한 사실을 꼬집으며

“워낙 실타래같이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 가지고는 표가 안 나요. 체감이 안 됩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화끈한 규제 완화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도를 넘은 비방과 모욕에는 침묵하더니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가격 인상에 대해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서민 부담만 늘리는 재정확충용이다.”

2005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가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며 한 말

“[폭행시비] 이번 계기를 통해 세월호 문제가 순수성을 잃고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져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의 다짐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유가족 무시’ 초심을 지키고 있는
새누리당의 대변인 권은희

“우리 체제의 특성상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부의 빠른 살포 금지 요청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임병철의 답변,
이럴 때만 집회 결사 자유 옹호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이 아닌 ‘인의 직장’으로 환골탈태 해야 한다.”

새누리당 박대출, 공공기관을
참을 ‘인’의 직장으로 만들려는 새누리당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으로써 민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주주의가 꽃필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

KBS 이사장 이인호,
박근혜가 자리에 앉힌 이유가 뻔하군

“내가 딸만 둘이다. 딸만 보면 예쁘다, 귀엽다고 하는 게 내 버릇이다. 그게 습관이 돼서 내가 귀엽다고 한 것. 손녀처럼 귀여워서 가슴 찢었다.”

골프장 캐디 성추행한 새누리당 박희태의 변명,
역시 성누리당 어디 가나

“[전 국정원장 원세훈에 대해] 정치개입이 유죄인데 선거개입이 무죄라는 것은 강도살인을 했는데 강도는 유죄고 살인은 무죄라는 말”

서울대 민주운동회 이호윤 회장

발행인 : 김인식 편집인 : 김인식 인쇄인 : (주)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 : 서울대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 02-777-2792 팩스 : 02-6499-2791
제보 : 02-777-2791 E-Mail : ws@wspaper.org

아르헨티나 총파업

피케테로스

지난번 위기 때는 실업자 운동이 주도했지만 이번 위기에는 조직 노동계급이 투쟁의 중심에 있다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이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4월 파업 소식은 본지 125호 기사 ‘아르헨티나를 강타한 반긴축 1백만 하루 총파업 — 노동자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를 보시오.)

아르헨티나 노총(CGT)이 호소한 이번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8월 27일 오후부터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CTA) 소속 노동조합들이 파업에 돌입해 기세를 올렸다. 28일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인 일반노조연맹(GWC) 등 여러 부문의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동참했다.

연금 삭감 반대, 고용 보장, 물가 인상률에 준하는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열기는 뜨거웠다. “노동인구의 80퍼센트가 총파업에 동참했다”(CGT 위원장 우고 모야노), 은행 · 주유소 · 학교가 문을 닫았고, 항공 노선도 잇달아 결항했다. 파업 동참의 의미로 축구 경기도 취소됐다.

노동자들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주요 도시에서 도로를 봉쇄하고 도시 외곽에서 물류를 통제했다.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조합인 철도노조(UF)와 항만 노동자 노동조합인 해양노조(SOMU)의 투쟁이 돋보였다. 특히 항만 노동자들은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의 80퍼센트가 이뤄지는 항구도시 로사리오의 선박 입출항을 통제해서 파업 효과를 높였다.

지난해 총선에서 1백만 표 이상 득표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연합 ‘좌파



사진 출처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CTA)

8월 28일 총파업에 나선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CTA) 소속 노동자들.

와 노동자 전선’(FIT) 소속 트로츠키주의 조직들과 소속 국회의원들도 파업을 지지했다.(FIT에 대해서는 본지 120호 기사 ‘아르헨티나 혁명적 좌파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보시오.)

경제 위기 고통전가

2000년대 초 공황을 겪은(2001~02년 아르헨티나 반란의 배경이 됐고, 당시 반란의 주축은 실업자 운동인 피케테로스였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이후 중국의 원자재 수입에 힘입어 회생하는 듯했으나, 근래

에 미국 발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7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정부가 국제 이자 지급에 실패하면서 “기술적 · 부분적 디폴트”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르헨티나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아르헨티나의 상반기 물가인상률은 공식 통계로만 31.3퍼센트였다. 하반기를 지나면 40퍼센트에 달할 것이라는

삼성 직업병 교섭을 둘러싼 논란

반올림의 원칙 있는 태도를 지지한다

지난 12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과 이들이 속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지난 7년간 끈질기게 싸워 일군 소중한 성과다. 이번 성과가 마땅히 더 많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반올림에 따르면, 현재까지 삼성 전자 계열사에서 확인된 직업병 피해자 수만 2백33명에 이르고, 그중 사망자는 98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삼성 측은 여전히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17일 열린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8차 교섭’에서도 사과, 보상, 재발방지 등의 요구에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삼성은 일부 피해자 가족이 별도로 구성된 가족대책위의 ‘조정위원회’ 구성 제안을 즉각 수용하며, 새롭게 교섭 틀을 짜자고 했다. 반올림은 이에 우려를 표하며 합의하길 거부했다.

삼성이 조정위원회 구성 카드를 덥석 문 것은 보상 기준 확대와 제도적 대책 마련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기 위해서다. 삼성은 그동안 “반올림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며 엉뚱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올림을 협상에서 배제하고 싶어했다. 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고 중재하는 구실을 할 것이기에, 반올림을 밀어내고 논의 수준을 낮출 방안으로 여겼을 것이다.

삼성은 그동안 피해자들 사이에 분열을 시도해 왔다. 피해자들이 함께 결성한 반올림을 ‘외부 단체’로 둔갑시켜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을 이간질하고, 교섭 대표로 나선 ‘피해자 8명’에 대한 보상을 우선 논의하자며 더 많은 산재 신청자 · 피해자들과 8명을 분리시키려 했다.

안타깝게도, 장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 가족들이 분열했다. 교섭 대표단에 포함된 피해자 가족의 일부는 삼성의 ‘8명 우선 보상’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며 별도 교섭 의사를 밝혔고, 최근에는 가족대책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반올림의 지적처럼, 이런 분열의 일차적 책임은 명백히 삼성에 있다.

그럼에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삼성이 손쉽게 조작하거나 장난질 치지 못하게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반올림의 입장은 옳다.

진보진영 내 일부는 ‘피해자들의 분열’을 우려해 반올림에 일정한 양보와 포용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반올림의 요구는 더 많은 피해자들과의 단결을 추구하는 올바른 방향에 서 있다.

박설



함께 참가합시다!

5차 생명과 안전의 물결

일시 : 2014년 9월 27일 (토) 오후 4시
장소 : 서울 종로1가 영풍문고 앞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전국 집중)

일시 : 2014년 9월 27일 (토) 오후 5시
장소 : 서울시청 광장
주최 :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회의

134호

온라인 기사를

읽어보세요

[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인권 신장은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군대 내 가혹행위 —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싸가지 없는 진보》와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황상기 · 이종란 맑시즘2014 연설]
삼성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노동계급의 변화 염원이
일단 좌절되다

[이집트]
정치적 민주주의 촉구 운동이
전진하고 있다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 취소 소송 패소

100일째 파업 중인
레이테코코리아 여성 노동자 인터뷰

www.
wspaper.org

박근혜에겐 미안하지만, 세월호 정국은 끝나지 않았다

김지윤

결국 박근혜가 본심을 드러내며 세월호 특별법을 견어쳤다. 박근혜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을 향한 최후 통첩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가 경제 침체의 원흉인 양 내세워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규제 완화와 연금 삭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하려 한다.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는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 대중의 안전을 기꺼이 내주려 한다.

서비스 산업과 노동 부문이 주요 공격 대상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의 칼끝은 노동계급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는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를 밀어붙이며 노동계급 주머니 털기를 시도하고 있다.

재벌들의 영업 실적이 감소하는 등 위기 재심화의 기미가 보이는 경제 상황은 박근혜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는 “우리 경제는 끝난 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회의장 정의화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반쪽 국회라도 열겠다고 나섰다.

‘거짓 민생’

그러나 상황이 박근혜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이 큰 비난에 직면해 두 차례나 실패한 것에서 보듯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에 대한 지지는 굳건하게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박근혜는 만족스러운 수준과 속도로 개악을 밀어 붙이기가 어려웠다. “유가족들의 국회 현안 의견 개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새누리당 대변인 박대출의 신경질적 반응은 세

특별법 제정 운동은 안전과 생명을 위한 여러 요구들을 공론화하는 구심 구실을 해오고 있다.

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이 개악을 막는 주요한 구실을 했음을 반영한다. 사실, 우파 언론이 유가족 폭행 시비를 침소봉대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 (▶관련 기사: 본지 웹사이트 ‘침소봉대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 흠집내기 중단하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민생의 핵심은 안전과 생명”이라며 “거짓 민생 법안”을 비판하며 분리 처리에 반대해 온 것은 매우 옳았다. 특별법 제정 운동은 안전과 생명을 위한 여러 요구들을 공론화하는 구심 구실을 해오고 있다. 새유족 대표들은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타협 없이 싸워야 한다.

진정한 동력

9월 27일 대규모 집회도 준비 중이다. 이 집회에서 박근혜의 후안무치와 우파 언론들의 야비한 공세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지지가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조직된 노동자 운동이 나서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물론이고, 의료 민영화 등 이 법안이 막고 있는 온갖 개악 조처들은 노동계급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이 운동에 지지를 보내고 참가해 왔다.

그러나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건설하려면 계급으로서 노동자들이 지닌 고유한 힘—즉, 이윤을 공격할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 이익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파업이라는 수단이 실제로 사용된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진미아 기자

진실과 정의를 양보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빠져 나가려는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강력히 잡아야 한다. 9월 13일 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교사대회.

세월호 특별법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억지

박근혜는 “그동안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체 무엇이 밝혀졌는가? 청와대는 국정조사에서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7시간 미스터리’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도 마찬가지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던 박근혜는 대체 어떤 책임을 졌나? 가족대책위가 “유가족,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

팽개쳐 버린 대통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고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

법학자 2백29명의 선언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검토를 통해 유가족들이 제시한 특별법이 헌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박근혜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특별법을 공격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 같은 민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

다고 주장한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일반 변호사가 임명되는 특검도 문제다.

대통령 불개입을 선언하며 “삼권분립”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 정작 본인이 국회 협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책임 규명의 화살이 자신을 겨눌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청와대를 막 조사하겠다는 건가?”라는 새누리당 주호영의 말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속내다.

진실과 정의를 억압하기

교육부는 16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 추모 ‘리본 달기’가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추모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판이 거세자 개인적 리본 달기는 괜찮다며 황급히 말을 바꾸는 꼴볼견을 연출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항의 집회 현장에서 사진채증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추모 리본을 달거나 ‘몸자보’를 하고 이동한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기까지 했다.

얼마 전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이유로 보건의료단

체연합 대표를 소환했다.

박근혜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연대,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나오는 행위 등이 모두 ‘불순한 외부세력’쯤으로 보이는 것이다. 물론 유가족을 고립시키려는 저열한 시도이기도 하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는 박근혜 입에서 “자유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빈번히 튀어나오는 것은 그래서 참고 듣기가 힘들다.

우파 언론들의 역겨운 ‘언론 플레이’

우파 언론들은 일부 유가족들의 ‘폭행 시비’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운동의 대의를 흠집 내며 혈안이 돼 있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나 몰라라 하던 언론들이 1면은 물론이고 여러 면을 할애해 가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역겹기 그지없다.

〈문화일보〉는 “유족으로 대접받다 특권의식”이 생겼다는 적반하장 격의 주장까지 실었다. 노숙 농성에 정치권과 우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을 감내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감히 할 말이 아니다.

언론들의 이런 역겨운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MBC 뉴스는 광화문 농성이 “불법 농성”이라며 “허가 없이 무단 점유했던 광화문광장. 시민들에게 광화문광장을 돌려주기 위한 엄정한 원칙

이 필요한 때”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이 언론들은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반면 ‘유민 아빠’ 김영오 씨에 대한 비방 보도에는 열을 올렸던 것은 물론이다.

‘기레기’들은 박근혜 정부를 지원 사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저들의 추악한 왜곡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기레기’들이 진실을 외면하는 동안 세월호 유가족들과 지지자들은 지역 홍보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층에서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이런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새로 나온 책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생각의길, 208쪽, 12,000원

권영국 변호사는 “지엄밀단적인 수사나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 세월호 사태를 덮으려는 시도를 견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출판 동기를 밝혔다.

이 책은 청해진해운의 문제에서 시작해 정부의 책임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따져 묻는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과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풍부한 자료들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싸증 유발자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이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에 서 물러나, 7·30 재보선 패배로 등장한 이후 채 두 달도 넘기지 못했다. 박영선이 비대위원장으로 한 일이라곤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금 위로하다 뒤통수를 친 것뿐이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다. 그래 놓고는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정치발전위원, 자유선진당 창당기획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상돈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다. 문재인도 이상돈을 설득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간 새정치연합은 새 정치, 민주주의의 어느 것 하나와도 관련이 없는 정당임을 드러냈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무용지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그간 행보는 진보 측 경쟁자가 사실상 없는 틈을 타 보수 쪽의 지지도 얻어 보겠다는 심산에서 나온 듯하다. 그 당은 2012년 총선 이래 선거에서 줄줄이 패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의료 민영화 강행, 서민 증세 등으로 박근혜의 지지율이 떨어져 왔지만 새정치연합은 반사이익조차 얻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심판 세력을 자처해도 도통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다.

어정쩡하게 투쟁에 발을 걸쳐 놓고는 “장외투쟁”을 외치다 슬그머니 돌



샌드위치 새정치연합은 현재의 지배질서 유지를 지지하므로 점증하는 대중의 불만에 불안을 느낀다.

아가는 일들을 반복했다. 게다가 과거 집권기 당시의 새정치연합의 전력은 박근혜 정부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곤 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결정적 순간에 운동의 뒤통수를 치며 새누리당과 정부를 위한 산소호흡기 구실을 해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새정치연합이 노골적으로 친자본주의적인 정당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세부적 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구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에는 합의할 수 있다.

그래 놓고는 선거 패배의 원인을 투쟁 탓으로 돌리기 일쑤였다. 우경화는 ‘국민 공감’ 운운하며 제안되는 선거 승리의 해법처럼 제시되곤 했다.

이런 실용주의적이고 배신적 행태는 여권이 정치적 지형을 오른쪽으로 물고 가려는 시도에 뜻하지 않게 힘을

실어 주게 된다.

박영선이 물러났지만 새정치연합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새정치연합은 당 내 우파로 꼽히는 문희상을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혔다. 문희상은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개정 등에 브레이크를 건 자다. 추대된 다음 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마도 새누리당이 국회 개원을 강행하면 새정치연합은 급격히 동요할 것이다. 지금도 새정치연합은 장외투쟁 출구전략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로 보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회로 들어갈 온갖 구실을 만들려 들 것이다. 국민, 민생, 경제 살리기 같은 익숙한 말들을 꺼내 놓으며 말이다.

새정치연합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과거 대처 집권기 연속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영국 노동당은 경제적 성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보수당 정책들을 수용했다. 교육, 보건, 복지 등 여러 부문에서 노동당의 정책은 점점 더 보수당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됐다.

오늘날에도 세계의 개혁주의 정당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복지를 삭감하고 자신을 지지한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강화할수록 새정치연합은 세계의 다른 여느 개혁주의 정당처럼 점점 더 실용주의적·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운동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선 안 되는 이유다.

김지윤

기성체제의 환심을 사려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성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도, 여야 간 다툼에서도 빠져 있으면서 개혁 이미지를 유지한 덕분인 듯하다.

물론 대선은 3년이나 남았고, 경제 위기로 정치 상황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 추세가 계속 유지될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개혁주의 정치는 집권 가능성이 커질수록 기성 정치·경제 체제에 더 아첨하기 마련이다.

개혁주의가 결국 자본주의 국가 기구를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개혁주의자들에게 당선은 대중의 심대한 불만이라는 요인과 함께, 기성 자본주의 질서의 수호자들과 얼마나 원활한 관

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성 체제는 이것을 ‘국정 운영 능력’이라 부르며, 개혁주의 정치인들에게 이를 입증받길 요구한다. 그래서 대체로 말해, 개혁주의 정치인들은 갈수록 지지 대중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실천을 자주 하게 된다.

참여연대 창립자 박원순 시장의 최근 행보도 그래 보인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 문제에서 박 시장은 중립적 중재자처럼 행동한다.

미국계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를 시정에 깊숙이 끌어들었고, 싱크홀, 작업장 안전사고, 석촌호수 문제 등 안전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된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해서는 모호한 태도로 롯데그룹의 편의를 봐 줬 왔다.

독재 미화 집단인 박정희기념재단에는 사유지를 민영화해 넘겨주는 특혜를 주려 한다.



실망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선한 박원순 시장이 개혁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맥킨지 컨설팅도 모자라 맥킨지 간부를 부시장급으로 영입함

3월 5일 서울시는 맥킨지에 의뢰한 ‘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무려 30억 원이나 들였다.

컨설팅 결과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들을 공공성보다 수익성 기준으로 뜯어고치라는 것이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그 결과에 호응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고통전가 정책인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 때문인지 올해 SH공사는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계획을 축소했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동자 복지와 인력 감축을 추진해 왔다. 애초에 기업주를 위한 민영화, 기업 합병과

구조조정 등의 컨설팅으로 악명 높은 맥킨지에게 거액의 컨설팅을 맡긴 것이 문제였다.

설상가상으로 박 시장은 아예 맥킨지 간부를 서울시로 영입했다. 9월 16일 맥킨지 한국지점 서울사무소 파트너 출신 서동록을 경제진흥실장에 임명했다. 이 자리는 ‘서울형 창조경제’를 이루겠다며 부시장급으로 신설한 직책이다.

박정희기념재단에 특혜를 주려 함

서울시는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를 박정희기념재단에 매각하려고 한다. 박정희기념재단에 대한 특혜다.

애초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우파들을 달래 보수층 표를 더 얻어 보려고 내놓은 공약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건립비용 수백억 원을 국고로 지원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고건은 한 술 더 떠, 사유지를 기념관 터로 무료 제공했다. 완공까지 10년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는 특혜였다.

기념관이 완공되면 건물을 기부채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 받고 시설의 절반을 공공도서관으로 하는 조건이긴 했지만, 우파는 돈도 별로 들이지 않고 국가의 재정으로 독재 정부를 미화하며 왜곡된 역사를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완공 후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않았다. 박정희기념재단은 그 틈을 타 공공도서관을 폐쇄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시정 지시가 아니라 아예 부지를 팔아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민영화’ 방식의 특혜다. 공공을 위해 써야 할 건물과 땅을 독재 미화 세력의 소유로 넘겨주는 것이다.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은 매각으로 서울시 수입을 늘리고, 우파의 환심도 살 수 있는 꿍 먹고 알 먹기라는 계산을 한 듯하다.

서울시의 박정희기념·도서관 터 매각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120다산콜센터 상담 노동자 투쟁

“진짜 사장인 박원순 시장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윤필언

서울시 종합민원전화 상담서비스를 하는 120다산콜센터(이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9월 18일 오후부터 부분 파업에 나섰고 19일부터 서울시청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감정 휴가’ 연 2회 보장, 악성콜 이후 ‘심리 안정’ 시간 제도화, 기본급 8퍼센트(8만 원) 인상, 육아휴직 후 불이익 금지, 유급병가 7일 보장, 노조 사무실 지원 등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서울시의 얼굴’로 불리며 서울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상담·처리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서울시에 직고용돼 있지 않고, 민간 위탁 업체 3곳에 나뉘어 간접고용돼 있다. 임금은 수당을 다 포함해도 1백40여만 원밖에 안 된다.

그간 민간 업체들은 서울시의 재계약을 따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이른바 ‘콜 수’ 경쟁을 부추겨 왔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 연차 외에 휴가도 없는 실정이다. 9월 18일 파업 집회에서 한 노동자는 “수술로 1주일 입원하고 바로 다음 날 출근해야 했다. 휴가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쓴 만큼 월급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악착같이 아픈 거 참고 일하러 나왔다” 하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전화를 받다가 “너 돌대가리냐?”와 같은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서도 화내지 못하고 웃으며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 소통을 앞세우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서비스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간 위탁 업체 3곳을 대표해 교섭에 나온 경총은 ‘심리 안정’ 시간은 들어줄 수 없고, 임금은 2만 원 이상 올려 주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가 내려 준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서울시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서울시청 로비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는 노사 간에 해결할 일이라며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 소속 주무관들이 다산콜센터 건물 1층에 상주하며, 수시로 콜센터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 인권위조차 올해 권고안에서 “다산콜센터의 상담 업무는 서울시의 상시·지속 업무로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민간 위탁이라는 간접 고용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 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

적했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민간위탁 간접고용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문제를 미루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박원순 시장님, ‘응답소’[서울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인터넷 창구] 만들어 놓고 우리 얘기는 안 듣고 뒤통수 치면 안 되죠” 하고 말

한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도 자신들의 업무가 서울의 공공서비스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때 서비스의 질도 더 좋아질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진짜 사장’으로서 서울시의 대표적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인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

참여연대 20년과 NGO 개혁주의의 정치 참여

김문성

현재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의 투톱이라 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참여연대 창립자들로 둘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 참여연대가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창립한 지 20년이 됐다. 낙천·낙선 운동 등 부패 반대 활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노동운동 친화적인 활동들을 해 왔고, 각종 개혁 입법 쟁취에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저항하는 운동에도 비교적 함께 해 왔다.

박원순과 조희연의 당선에서 보듯, 참여연대는 이 사회의 특권층 부패과 차별, 이윤 시스템에 분노하고 사회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진보적 청장년층에서 아직도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20년 동안 엄격한 내규로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를 제

한해 왔다.

이는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것이 입법을 위해 좌우파 모두와 협력할 수 있고 국민적 압력에도 유리하다는 NGO식 실용주의 발상이기도 하다. 2005년까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의 12.1퍼센트, 14대에서 17대 국회까지 개정된 법의 5.3퍼센트가 참여연대 주도 법안이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기층의 압력을 대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식정치 안에서도 명망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에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한 단체가 순전히 비정치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류 보수정당의 경쟁 정당, 즉 민주당과의 협력에 주로 의존해 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까지 참여연대는 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비중이 꽤 높았다. 집행위원 이상 임원 40명이 정부 위원회 1백1개에 참여했다.

선출직 공직자로 진출한 임원 출신

들도 압도 다수가 민주당이었다(소수는 진보정당).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군중집회, 농성 등을 포함한 직접행동의 비중이 이전보다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 우파 정부가 진보적 NGO들을 거버넌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참여연대의 정치 방침은 독자 정치세력화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정치적 당파성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과는 당선 과정에서부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1백36개의 거버넌스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민주당 집권시 비판을 아끼고, 운동을 민주당의 보조물로 제한하려 해 온 것이 참여연대의 문제였다. 예를 들어, 최근 박원순 시장의 우경화 행보에도 참여연대의 예리한 비판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9월 3일 참여연대 등 여러 진보 단체들이 주최한 서

울시의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규탄 기자회견문에서 프리오픈을 결정한 박원순 시장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가 지지자들에게 실망과 한탄을 준 집권 후반기에 참여연대 회원이 20퍼센트 넘게 감소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나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촛불시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에서 참여연대는 참가자들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기보다 운동 안으로 민주당 개혁파 입장을 전달하는 벨트 구실을 해 왔다.

그런데 최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태호 사무처장은 ‘탈진영론’을 주장한다.

“[사회의] 보수화보다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화에 맞서야 할 것 같다. …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 진영 논리는 사회 발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걷으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 상대가 보수일 수 있다. 시민운동이 조금 더 건전해지려면 상대와 협력하고 대화해야 한다. 진영 간의 모욕과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

고통전가에 여념이 없는 박근혜 정부와 노골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운동 안에서 민주당 개혁파를 대변하는 구실을 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계급 협력주의는 최근 새정치연합에 가해지는 중도화(우경화) 압력과도 관계가 있는 듯하다. 또한 국회가 ‘진영 논리’로 마비되면 NGO식 실용주의도 윤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들조차 존재감이 약화된 조건에서 NGO 개혁주의가 민주당 의존증을 버리기는 힘들 것이다. 이는 최근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안에서 참여연대 리더들이 취한 태도로도 드러났다.

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참여연대보다 더 급진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가 필요하다.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조합원·최미진

공무원연금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새누리당의 개악안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18일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역대 최악의 개악안이다.

이 안의 핵심 특징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개악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급보다 50퍼센트를 더 내고 30퍼센트를 덜 받게 돼, 사실상 낸 만큼만 받아 가는 적금이나 다름없다. 공적연금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려 한다.

연금 지급 시점도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늦추려 한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악 때문에 2010년 이후 입사자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를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하려

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5년 뒤에나 연금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간질

2016년 이후 입사할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국민연금과 똑같은 부담과 급여를 적용하려 한다. 미래의 공무원이 될 청년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을 유지·확대해 이간질하려는 수작이기도 하다.

심지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도 수령액의 3퍼센트를 도로 떼줘야 한다.

연금학회는 연금을 대폭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인상하거나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안을 냈다. 마치 일부 양보하는 것 같지만 이조차도 썩수다. 퇴직연금 도입은 민간 보험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다. 수익에 눈 먼 민간 보험사들의 손에 퇴직금이 들어가면 노동자들의 노후는 시장의 불안정성에 내맡겨지게 된다.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으라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격은 공적연금·전체 노동자 임금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은 특권층인가

연금 개악론자들은 공무원이 다른 노동자보다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양 마녀사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이 공무원들을 싼값에 부리면서 충성을 요구하려고 현재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만든 것”(제갈현숙)이다.

사실 진정한 특권층은 박근혜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다. 박근혜는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임기가 끝나면 연봉(2억 원 가량)의 95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재직 중 열악한 급여를 받고, 퇴직 후 취업도 제한되며, 정치 활동도 금지된다. 일반직공무원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노동자 임금의 77.6퍼센트를 받는다(2013년 기준, 안행부 연구용역보고서). 따라서 공무원연금은 재직 당시 낮은 급여를 미래에 보전 받는 **후불임금** 성격이 있다.

게다가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9만 7천 원을 내는 데 반해 공무원은 26만 1천 원을 낸다. 가입 기간도

공무원 연금은 30년 정도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20년 정도다.

무엇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받는 연금은 “27년 3개월 근무한 노동자가 17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정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인데, 모든 노동자가 이 정도는 받아야 인간다운 노후를 유지할 수 있다. 왜 평생을 헌신한 노동자들이 용돈 수준의 연금만 받으며 비루한 말년을 걱정해야 하는가? 다른 노동자들의 진정한 바람도 공무원연금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민간 보험회사들로 이뤄진 연금학회 — 강도에게 보파리 맡기기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만든 연금학회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미래에셋, 한화생명 등 민간 금융기관들로 구성돼 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감사를 맡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자신들의 시장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다.

노동자들이 사적연금에 더 많이 의존하도록 공적연금을 더 부실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지상 과제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노후 불안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할 뿐이다. 우리의 노후를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국민연금이 열악한데,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리려느냐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누더기로 만들어 왔던 당사자들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적극 주장해 왔고, 변질된 기초연금 도입의 수문장 역할을 [했다]”(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위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0퍼센트(OECD 1위)나 되고,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절반 이상이다. 그나마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겨우 42만 원(여성은 23만 원)으로 최저생계비도 안 된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먼저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도 낮추라고 말한다. 이렇게 공적연금 전반을 부실하게 만들고, 사적연금은 활성화하려는 것이 지배자들의 연금 개악 방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과 다른 부문 노동자 사이의 분열을 꾀한다.

즉,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공무

원연금 사이의 수익 차이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너무나 열악해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다.

상향평준화

게다가 국민연금의 추가 개악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두 차례의 개악으로 ‘용돈 연금’으로 전락했음에도,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개악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7월경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악안을 제시했다.

저들이 공무원연금을 쉽게 깎을 수 있다면, 가입자들이 조직돼 있지 않은 국민연금은 더 쉽게 깎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잘 지켜내야 공적연금 전반의 개악 도미노를 막을 수 있다**. 또, 지금 정부가 통상임금 공격,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 삭감 등을 공무원연금 공격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격이 전체 노동자 임금에 대한 공격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이 부족해 개악은 불가피한가?

공무원연금 개악론자들은 기금 적자를 정부 재정으로 메꾸고 있는 만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해 공무원연금 개악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중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한국만큼 적은 곳은 별로 없다. OECD 주요국 공무원연금 지출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GDP의 0.6퍼센트밖에 안 되는

반면, OECD 평균은 1.5퍼센트다. 박근혜 정부는 요즘 ‘독일 모델’을 본받자고 하는데, 독일 공무원연금의 경우 노동자가 기여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무엇보다, 공적 연금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들에게 ‘오래 사는 게 문제다. 연금을 적게 받으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그만큼 더 필요한 돈을 국가가 더 투자해야 한다. 그 재원은 노동자들

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더 걸어야 한다.

담뱃세,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증세로 노동자들의 등골을 뽀지 말고, 이명박 정부 때 깎아 준 부자 증세를 되돌리고 기업들이 엄청나게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걷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이든 민간 부문이든 노동계급 전체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투쟁과 연대 건설이 중요하다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성공적으로 저지한다면 국민연금의 추가 개악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박근혜의 전반적 공세를 저지하는 데도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9월 27일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 때 조직적으

로 항의할 예정이다. 11월 1일에는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시” 전 지부 비상총회를 개최해 “정의행위 찬반투표”와 “총파업 및 총력 투쟁”을 한다고 결의했다. 지금 정부의 개악안 추진 시점이 당겨진 만큼, 총궐기 전부터 ‘총파

업 및 총력투쟁’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 또, 지난 6월 28일 ‘연금개악 저지 결의대회’처럼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내는 행동이 시급히 조직돼야 한다.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도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5년 예산안과 담뱃세·주민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슈퍼 예산’이 아니라 내핍 강요 예산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년 예산 지출을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5.7퍼센트) 늘어난 3백76조 원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 6천억 원(GDP 대비 2.1퍼센트), 국가채무는 5백70조 1천억 원(GDP 대비 35.7퍼센트)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일시적 재정 적자를 확대하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운용을 선택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한다. 보수 언론들도 ‘슈퍼 예산’이고 엄청난 재정 적자가 걱정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예산 지출 증가율이 2011년 5.5퍼센트, 2012년 5.3퍼센트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내년 증가율 5.7퍼센트는 전혀 확장적 예산이 아니다. GDP 대비 2.1퍼센트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도 다른 OECD 국가들에 견줘 높은 편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 비중이 2014년 29.9퍼센트에서 2015년에는 30.7퍼센트로 늘었다며 엄청난 복지 확대 예산인 양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 증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지 확대도 거의 없는 것이 진실이다.

내년 복지예산 증가분(9조 1천억 원) 가운데 대부분은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의 자연 증가분이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늘려야 하는 부분만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 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약 12만 명을 추가로 보호하게 됐다고도 홍보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로 ‘불법’ 수급자를 찾아낸다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9년 1백 56만여 명에서 올해 6월 1백34만여 명으로 오히려 감소해 왔다. 게다가 우리 나라 빈곤층이 4백10만 명이나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생색내기도 못 되는 수준이다.



사진 이미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지 말라

교육 예산도 거의 늘어나지 않아 0~5세 무상보육, 초등 돌봄교실 예산이 부족해 내년에 또다시 ‘보육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박근혜의 주요 대선공약인 고교 무상교육도 무산됐다.

또,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대상자 수가 고작 6천 명이고 지원 예산은 1백60억 원밖에 안 된다.

서민 증세와 내핍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경기 부양을 위한 슈퍼 예산’, ‘서민 지원 예산안’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경제 위기로 늘지 않는 세수에 맞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내핍 강요 예산일 뿐이다.

게다가 세수 부족과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담뱃세 2천 원 인상과 지방세(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증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국세 증가분 5조 1천억 원 중 담뱃세 인상분이 무려 1조 8천억 원에 이른다.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는 노인을 예로 들면 기초연금을 10만 원 늘려주고 6만 원을 다시 담뱃값으로 뺏어가는 격”(홍기용 인천대 교수)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재정적자의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의 일환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부자 감세로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 즈음에 중소·중견기업의 소유주가 기업을 물려줄 때 1천억 원까지는 세금

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법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하면 1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는 법안도 상정했다.

이렇게 부자 감세에 집착하다 보니 이명박 정부 때 깎아 준 법인세와 소득세를 원상대로 회복하라는 온건한 요구에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공기업 부채를 빌미로 한전·발전 공기업들의 지분 매각, 전력판매 시장 민영화, 철도 인력 감축과 분할·민영화,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매각과 임대주택사업 축소 등 대대적인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전기·가스·철도·도로 등의 공공요금 인상도 낄 것이다.

2015년 예산안과 서민 증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기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지를 보여 준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민영화를 좌절시키고, 재벌·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지출을 대거 확대하고, 정규직화와 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해야만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강동훈

관리재정수지

국민연금, 사회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

세계경제

디플레이션의 위협과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유럽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유로 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퍼센트 증가에 그쳤다. 이는 1961년 이후 (2009년에 0.4퍼센트를 기록했던 때를 제외하면) 50여 년 만에 가장 낮다.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은 더 낮아졌다. 8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미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유럽의 경제 성장은 독일과 같은 중심부 국가들이 이끌어가는 형국인데, 지난해 독일의 실질 임금은 하락했고, 이를 볼 때 향후 물가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이유는 디플레이션 시기에 경제

위기의 고통이 대체로 더욱 혹독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노동자들은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 그에 비해 디플레이션 때는 버티지 못한 기업들의 파산이 늘고 노동자 해고가 늘어날 수 있다.

흔히 가게의 소비가 위축되고, 세수가 감소하는 데 반해 지출은 증가해,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일본이 겪고 있는 일이다. 일본은 1991년 거품 붕괴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저투자, 저고용, 저소비의 늪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2012년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1997년 명목 GDP의 91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백30퍼센트에 달하는 것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뿐 아니라 미국이나 심지어 중국도 일본식 장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조차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식 장기 침체

실제로, 일본이 장기 침체로 빠져든 배경과 현재 여러 나라 경제들이 처한 상황에는 공통점이 많다. 1986~1989년에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이 두 배로 올랐다. 이런 거품은 1970년대 이후 계속된 세계 자본주의의 이윤율 저하 경향 속에서 형성됐다. 일본의 장기 침체는 이 부동산 투기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했다. 최근 중국 경제도 제조업·민간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 들어 8월까지 중국의 누적 주택 판매는 전년 대비 10.9퍼센트 하락했다.

경제 정책 제안자들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양적 완화가 경기 추락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상황은 양적 완화의 모순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경기가 느리게나마 회복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거품이 커졌다. 지난 몇 년간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서브프라임 자동차 담보 대출이 급증하고, 주식 담보대출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이윤율이 계속 낮은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해 쏟아부은 돈들이 새로운 부실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양적완화 정책을 10월에 종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물 경제의 회복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이어

서 저금리 정책은 당분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만 언제 거품이 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 교수 로버트 실러도 미국 주가가 과거 금융위기 직전 수준에 이르렀다며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고, 조지 소로스 등 월가의 큰손들은 조만간 거품이 터질 수 있다며 주식 급락에 대비한 금융 상품들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가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부실한 금융 자산과 부채 문제는 더욱 커졌고, 낮은 이윤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과 신흥공업국 경제들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는 세계경제에 중요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선영

마르크스주의로 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 글은 김공회 당인리 대안정책발전소 연구위원(사진)이 맑시즘2014에서 강연한 “마르크스주의로 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를 녹취한 것이다. 본지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피케티의 이 책이 영어로 번역돼 출간된 게 올해 3월입니다. 지난해에 먼저 프랑스어로 나왔고, 나온 직후에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가지고요. 피케티는 가히 ‘록 스타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마르크스하고 관계가 재미있는데, 일단 피케티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시면 《자본론》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하고, 마르크스에 대해서 호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터뷰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은 적이 없다”면서 인터뷰한 사람에게 “그럼 너는 《자본론》을 읽었느냐” 하고 물으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르크스를 호되게 비판을 합니다.

피케티의 논의

그럼 《21세기 자본》 요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은 전부 다 피케티가 만든 것에서 따온 거고요, 이 사람은 친절하게 자기가 쓴 데이터나 그래프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케티는 1970년대 이후에 소득불평등의 심화(자본주의에서 소득불평등은 항상 있어서 그래서 심화라고 했습니다)를 문제삼습니다.

[그림1]을 보시면, 1940년대부터 국민소득 중에 상위 10퍼센트가 가져가는 몫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급격히 증가하지요. 미국 같은 경우, 35퍼센트에서 유지되다가 1970년대부터 치솟습니다. 즉 1970년대 중반쯤부터 뭔가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중간에 수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면, 피케티는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r(자산수익률)이 g(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을 꼽습니다. 피케티는 ‘r>g’ 부등식을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이라고 표현합니다. r>g 라면, 경제가 일정한 비율로 성장을 하는데 자산수익률은 그보다 높아요. 그러면 경제성장률에 따라 나오는 것이 GDP인데, 여기에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이 점점 커지겠죠.

[그림2]는 조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한 점이 1000년이에요. 예를 들어, ‘서기 0년부터 1000년까지 평균적으로 연간 자산수익률이 4.5퍼센트 정도다’



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이 엄밀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을 참조해 가정하는 것인데, 하예튼 피케티의 논의를 따라가자면 역사를 통틀어서 꾸준히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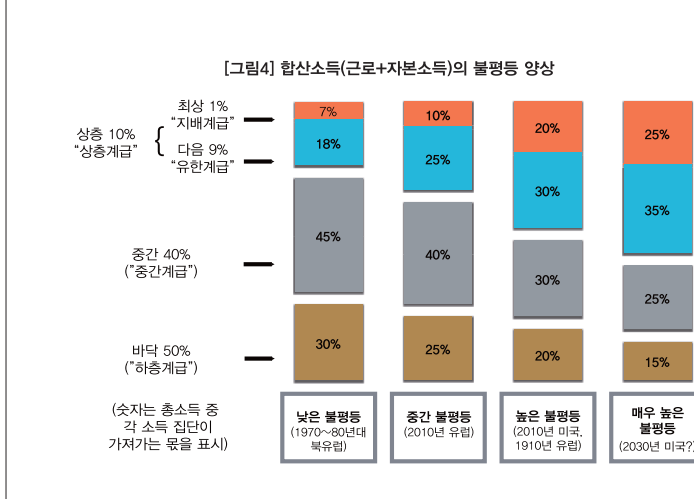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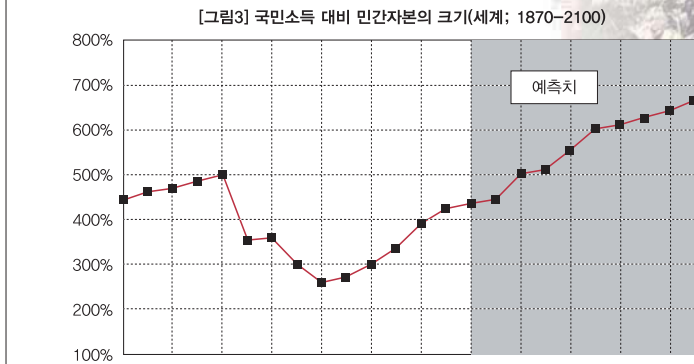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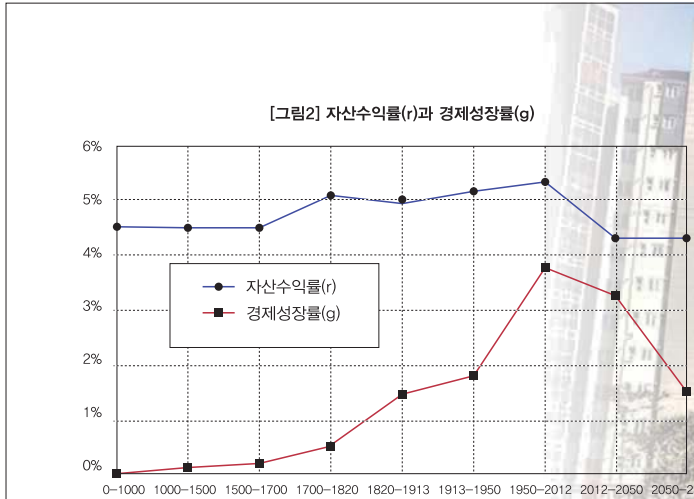
이렇게 되면 자산은 쌓이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GDP 대비 자산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림3]이 GDP 대비 자산 크기를 보여 주는 건데, 대체로 1950년부터 국민소득에 비해서 자산이 더 빠르게 축적된다는 걸 보여 줍니다. 2010년 이후는 추정한 겁니다. r>g 부등식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대로 가면 2100년쯤에는 총자산이 GDP에 7배 정도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그림4]는 피케티가 엄청난 자료를 모아서 유효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지역마다 불평등의 정도를 구별하는 거예요. 최근의 미국은 ‘높은 불평등’에 해당하고, 흔히 ‘벨에포크’라고 불리는 1910년대의 유럽도 그렇습니다. 즉, 현재 미국과 100년 전의 유럽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케티가 현재 상황이 옛날에 아주 나뉘면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습니다.

다른 불평등 논의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피케티만 한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5]는 미국 의회에 산처에서 만든 겁니다. 사람들을 소득 순위에 따라 20퍼센트씩 나누었는데요, 주의할 것은 상위 20퍼센트는 별도로 1퍼센트와 나머지 19퍼센트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째,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증가



율이 낮다는 겁니다. 제일 낮은 20퍼센트의 1979년 대비 2007년 소득이 20퍼센트 정도 증가했죠, 30년 동안 1년에 1퍼센트도 못 되게 증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조금씩 증가하지만 미미하게 증가합니다.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둘째, 99퍼센트까지의 등차수열 비슷하게 올랐는데, 제일 꼭대기인 1퍼센트의 증가율은 거의 300퍼센트로 훨씬 크게 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인데, 특히 최상위 1퍼센트가 더 많은 이득을 본 거죠. 다시 말해, 지난 30년간 일어난 경제 성장의 과실을 거의 전부 가장 부유한 1퍼센트가 독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아쨌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케티와 똑같은 분석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1970년대 초중반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소득불평등이 심화했다는 것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한 진단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진단이 다양하다는 것은 처방도 다양하게 된다는 거죠.

세습 자본주의

그런데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들로 불평등을 논하는 최근의 논자들과 피케티 사이엔 매우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논의들은 대체로 194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

지를 관찰합니다. 이는 선진국이라고 해도 그 이전의 거시경제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더라도 불확실한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연스럽게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일종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불평등 심화를 ‘정상으로부터의 이탈’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피케티는 20세기 초, 나아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자료까지 씁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자면, 1970년대 이후의 불평등 심화는 ‘정상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기존의 정상으로의 복귀’로 보인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자본주의 발달을 장기적인 시계에서 보니 오히려 이상한 것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피케티는 현재 우리가 19세기 식의 ‘세습 자본주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매우 끔찍해 보이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상위 10퍼센트의 사람들이 주로 가져가는 소득의 형태는 자산소득이 많은데, 자산은 세습되기 마련이니 말입니다.

세습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형태라면 1940년대부터 1970년까지는 2050년쯤 되면 [자선에 대한] 세율이 거의 0이 되지 않겠느냐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r>g 부등식

고 그 답을 세금에서 찾습니다. 조금 전에 자본주의가 불평등한 이유가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산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자산가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 테니,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피케티가 관찰했듯이 그 불평등이 좀 완화가 됐지요.

[그림6]에서 빨간색 점선이 세전 자산수익률입니다(피케티는 자산과 자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본에 세금을 매기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때마침 전쟁이 벌어져 자본이 파괴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지겠죠? 1913년부터 1950년 사이에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결과 5퍼센트에 이르던 자산수익률이 1퍼센트 선으로 급격히 떨어지죠. 그러는 사이에 경제성장률이 다소 높아져, 결과적으로 r>g라는 부등식의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이후 기간 1950~2012년에는 전쟁이 없었으니 수익률은 좀 올라가나 경제성장률이 높아 여전히 부등호가 역전된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피케티는 이런 상황이 미래에도 지속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바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는 2050년쯤 되면 [자선에 대한] 세율이 거의 0이 되지 않겠느냐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r>g 부등식



이 회복되어 불평등이 다시금 증가하고, 자본주의도 옛날 같은 세습 자본주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이상과 같은 논의 끝에 피케티는 오늘날 다시금 점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불평등은 무엇보다도 자산소유의 불평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니 다. 뿐만 아니라 자본소유로부터 얻는

소득뿐 아니라 실제 일한 것과 무관하게 높은 연봉도 규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처방들은, 제대로 실현되다면 오늘날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케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줘야 할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제일 중요하고 또 가장 이론적인 것인데, 앞서 봤듯이 피케티는 자산수익률을 거시 지표인 것처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r(자산수익률)을 거시 지표로 간주하고, 한 국가는 물론 세계경제에 대해서 r을 계산하고 g(경제성장률)과 대비시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불평등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미시적 차원의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미시적 차원에서는 거시적 평균치로서의 r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해 보면, 예를 들어 제가 빌딩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r은 5퍼센트예요. 그렇다고 제가 5퍼센트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그건 전혀 장담할 수 없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형태라던가, 그 자산이 어디에 있는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익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자산이 다양한 형태로 유통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700년도에는 의미가 있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r>g 부등식이 국민경제나 세계경제 차원에서 성립한다고 해도, 자본주의가 더 발달함에 따라 자산 소유자들이 더 이득을 본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산 소유자들은 이득을 보겠지만, 다른 자산 소유자들은 g보다 낮은 수익률에 만족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동학을 r>g 부등식으로 요약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겁니다. 마르크스 같았으면 ‘공허한 추상’이라고 했을 겁니다.

따라서 r>g 부등식을 불평등의 ‘원인’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건 이미 벌어진 불평등을 거시적 차원에서 확인해 주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피케티가 r이 g보다 크다는 게 자본주의의 핵심 동학이고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하면 서도 증명할 못 해요. 관찰만 해요. 이게 피케티의 중요한 결점입니다. 그러나 이렇 수밖에 없는 건 이게(r>g) 불평

등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리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을 텐데, 그 역시 공허한 추상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방금 이 자본가는 어떻고 저 자본가는 어떻게 했는데, 이게 뭐니까, 바로 경쟁입니다. 개별 자본 간에 수익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포착하는 개념이 경쟁입니다. 그런데 경쟁 때문에 상이한 자본 사이의 수익률 차이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중에서 일정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몰락시키기도 하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 사이에 부가 집중되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할 거예요. 이런 본래 경쟁이 사회 전체 불평등에 한 계기를 이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케티는 특히 1970년도 이후에 소수에 의한 부의 점증하는 독점이라는 현상을 골짜기 ‘세습사회’로의 회귀로 해석합니다. 이는 경쟁을 무시한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할니까? 부가 소수에 집중되고 있을지언정, 그 소수는 결코 고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조사하는 부자 랭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바뀌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니까, 바로 경쟁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피케티가 의미하는 고정성이 없다면 세습 자본주의로의 회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불평등이 여기에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을 얘기하다 보면 생산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피케티는 애초부터 “나는 분배 이론을 다루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피케티가 불평등을 해명하고, 분배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도 생산을 봐야 해요.

특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분배 영역에서 자산 소유자 간에 투쟁(경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사실 원리상 분배는 생산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생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산소유자들이 위계적으로 구조화돼 있을 겁니다. 직접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치를 분배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부터 그 분배 받는 양상이 달라지겠죠. 이를테면 금융자산가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면, 덜 가져간다면 가 하는 식으로 분배 양상이 변할 겁니다. 이런 위계가 자산 소유자 간에 분배 투쟁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자산 소유자 간에 분배 경쟁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산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여태까지 노동자가 안 나왔습니다. 자산 비(非)소유자가 안 나와요. 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생산 영역에 있습니다. 생산 영역에서 자산 소유자들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생산하다 크다는 게 자본주의의 핵심 동학이고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하면 서도 증명할 못 해요. 관찰만 해요. 이게 피케티의 중요한 결점입니다. 그러나 이렇 수밖에 없는 건 양자 간에 분배를

1차적으로 규정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피케티는 분배 이론을 내놓고자 자신의 논의를 본래 영역으로 한정시켰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적절한 분배 이론도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고요, 피케티가 분배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생산 영역까지 포함했더라면, 분배상의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좀 더 복합적으로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논의도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1 대 99

피케티에 대한 비판 둘째는 피케티가 최상층의 1퍼센트, 그리고 더 들어가면 0.1퍼센트, 0.01퍼센트를 이론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1 대 99’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접근이 나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은 불평등은 언제나 계급적인 문제였고, 계급적인 문제니까 당연히 생산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은 언제나 빈곤, 동능격자, 제국주의 등 이런 문제들과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분데 피케티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거시적 소득 분배로 단순화해 버렸다는 문제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의 논의는 기존에 마르크스주의의 자장 안에서 배양되었던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과 함께 융화됨으로써 상호간에 발전의 계기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케티는 1915년부터 1970년 사이에 불평등의 완화를 고율의 세금 덕분에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시기는 노동운동의 융성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본수익률이 과연 세금 때문에 낮아졌는지, 아니면 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낮아졌는지 이걸 한 번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걸 쉽게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피케티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죠.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크루그먼 같은 사람도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는 책에서 노동운동의 융성을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을 정도니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세계의 의의에 지나치게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그가 주로 참조하는 자료가 과세자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제의 변화에 따른 분배상의 변화가 두드러져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피케티가 20세기 역사에서 노동운동을 경시하기도 하지만, 20세기 세제사도 너무 단순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소득세제나 고율의 최고 소득세율의 도입은 세계대전 같은 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다시 떨어지죠. 그러나 이렇게 도입된 세금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강력한 노동계급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 고율의 소득세는 산업의 국유화, 사회화와 한 묶음으로 진행된 거예요. 이런 한국에서 거의

피케티는 최상위 1퍼센트를 공격합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나머지 99퍼센트의 옹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퍼센트 바로 위의 (그 자신도 마찬가지로 부자인) 9퍼센트나 19퍼센트의 입장에서 1퍼센트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가난한 50퍼센트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피케티는 어느 쪽일까요? 불행히도 피케티나 그로부터 자극받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비참한 대다수의 민중에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피케티의 경제학은 99퍼센트를 위한 경제학이 아니라 9퍼센트를 위한 경제학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물론 9퍼센트 대신 19퍼센트라고 써도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 나머지 90퍼센트 또는 80퍼센트의 노동대중들이 이러한 문제에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저 부자들끼리의 다름에 둘러릴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 이 세계의 불평등도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피케티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투철한 계급의식을 가져야 함을 일러줍니다.

녹취 조준은 이재웅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자본》 코드 풀기

세계적 석학으로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 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사진)가 8월 7~10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4'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캘리니코스가 8월 8일 강연한 '《자본》 코드 풀기'를 녹취한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본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이유 하나는 올해 초 영어로 출간된 책 한 권입니다. 그 책은 프랑스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입니다. 주류 언론이 이 책에 대해 여러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 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제목은 사실 마르크스의 걸작 《자본》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피케티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고, 그 스스로도 마르크스의 《자본》을 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책 제목을 '21세기 자본'이라고 지은 것을 보면, 피케티는 19세기에 마르크스가 했던 일을 21세기에 해 보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듯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은 단지 19세기 뿐 아니라, 21세기에도 마찬가지로 유용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강신준 옮김, 창비 출판, 2011)가 큰 인기를 얻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비처럼 저도 마르크스의 《자본》이 왜 오늘날의 현실에도 잘 들어맞는지를 제 책 《Deciphering Capital》(Bookmarks Publication, 2014)에서 밝혔고, 오늘 강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의 제목은 《자본》 코드 풀기인데,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은 마르크스의 저작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저작이 다른 대상, 즉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제 책에는 《자본》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관한 설명이 많습니다. 《자본》은 오늘날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본》보다는 자본주의에 초점을 더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자본》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날 왜 자본에 관한 얘기가 많을까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왜 그토록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답은 2007년 8월 세계경제 위기가 시작된 지 올해로 정확히 7년이 됐지만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보가 아니고서는 경제 위기가 끝났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도 세계 자본주의가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을 시인합니다. 예컨대 그들은 새로운 경제 침체의 시대에 대해 말합니다. 마르크스

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쓴 장기 불황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장기 불황은 오랜 기간 경제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고 때로는 경제가 수축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자본을 그토록 많이 거론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가 경제 위기 시기일 뿐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불평등

심지어 세계 자본주의의 대주교라고 할 수 있는 IMF 같은 기구들조차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계속 하락하는 반면, 극소수는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예컨대 제가 살고 있는 런던은 백만장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지금은 영국 정부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 상황인데도 많은 러시아 갑부들이 거액을 들여 영국 비자를 구입합니다.

세계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가 결합되면서 정치경제학에 비판적인 사상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주류 경제학은 무용지물임이 판명났습니다. 이 자리에 경제학 학위가 있는 분이 있다면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경제학 학위는 '나는 경제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서와 다름없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경제 위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류 경제학은 현재의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가 《자본》의 부제로 '정치경제학 비판'을 쓴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말로써 마르크스가 단지 당시 정치경제학을 비판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의 동역학을 더 잘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피케티의 저작을 논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피케티는 주류 경제학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물역사적이라는 것 등의 문제이죠. 그러나 여러 면에서 피케티 자신도 주류 경제학의 이론적 틀에 갇혀 있습니다.

피케티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피케티 책의 주요 강점은 경험적 자료를 한 데 모았다는 것입니다. 피케티는 다른 경제학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선진국의 불평등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가 밝혀 낸 것은 지난 2백 년 동안의 자본주의 역사 내내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등 수준은 대략 1백 년 전인 20세기 초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피케티가 사용하는 주요 지표 하나는 국민소득과 자본의 양의 관계를 나타낸 '자본/소득 비율'입니다. 자본/소득 비율은 1914년에 6백~7백 퍼센트로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사회의 부는 대부분 상속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부를 가진 부자들은 그 부를 자식들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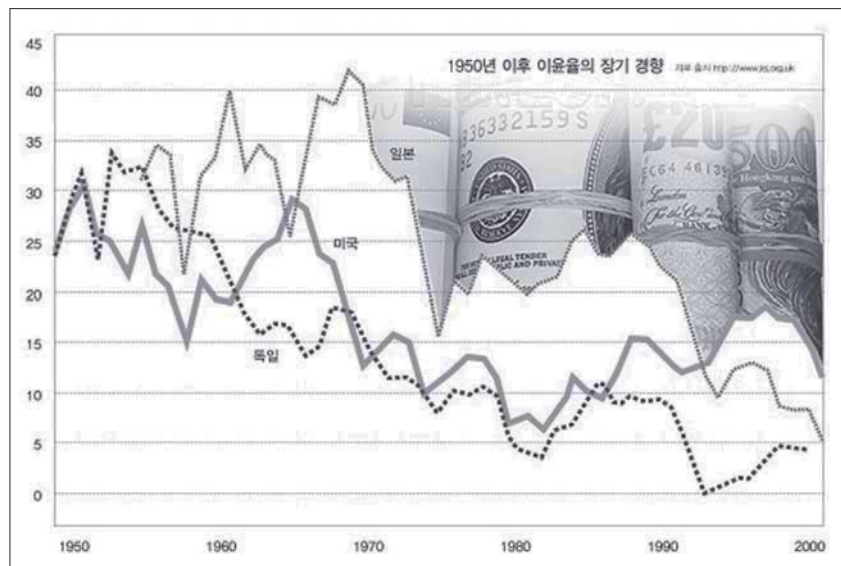
피케티는 이런 패턴이 20세기 전반기에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세계 대공황과 양차 세계대전이 그런 부의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특히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각국 정부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걷었고, 그래서 부자들이 물려 줄 수 있는 부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불평등이 다시 커졌습니다.

피케티는 현재의 추세는 역전되지 않으면 불평등이 1914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즉,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물려 주는 부가 경제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수준으로까지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피케티의 수치

이런 경험적 분석은 매우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국의 주요 친기업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피케티가 제시한 수치를 반박하려다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됐습니다. 심지어 대다수 주류 경제학자들조차 《파이낸셜 타임스》가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피케티가 제시한 수치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피케티의 약점은 이 수치들을 쫓아 설명하는 방식에서 비롯합니다. 피케티는 불평등의 증가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r이 g보다 크다'라는, 이제 많이 알려진 공식으로 설명합니다. r은 자본수익률로, 자본을 투자해서 버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나



자본주의에서 사라질 수 없는 불평등

타내는 수치입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이윤율이라고 불렀습니다. g는 경제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산출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피케티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대체로 더 높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부자들은 계속해서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부자들이 소비를 경제성장률만큼 늘리더라도 이윤은 여전히 남습니다. 부자들이 그 남은 이윤을 저축한다면 자본의 규모가 커

지고 국가 경제의 규모보다 자본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경제적 비중이 나머지 사람들에 견줘 더 커집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피케티의 분석이 불평등의 증가를 기계론적으로 설명한다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불평등의 증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이는 피케티가 여러 면에서 여전히 주류 경제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

다.

예를 들어, 다른 경제학자들처럼 피케티도 전쟁과 경제 위기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발전과 긴밀히 연관돼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전쟁과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기는 불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치 제1차세계대전과 대공황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1차세계대전, 대공황, 최근의 경제 위기가 자본주의에 내재한 모순과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의 경쟁에서 비롯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자본 개념 자체와 관련 있습니다. 피케티는 갖가지 부를 모두 자본으로 봅니다. 공장·주택·귀금속 등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사회적 관계

마르크스는 자본을 전혀 다르게 규정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본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는 '자본은 특정 사물이 아니다' 하고 힘주어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토지나 설비 등이 자본이라고 본 당시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반대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런 것들은 그저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요소들일 뿐이다' 했습니다.

오늘날 경제 체제를 규정하는 자본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자본은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관계로 규정됩니다.

첫째,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착취 관계입니다. 자본가(기업)들이 노동자들에 대해 가지는 핵심적 우위는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오직 일할 능력, 즉 노동력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불평등입니다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돈에 힘이 있다고 했는데, 자본가들은 그 돈 덕분에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착취는 노동자로 하여금 이윤(마르크스의 말로 잉여가치)을 창출하는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관계는 자본가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은 오로지 많은 자본들(다수 자본)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해, 자본가 계급은 조화롭게 통합돼 있는 단일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가들은 '서로 다투는 형제들'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절도 행각을 함께 벌이는 데서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도적떼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도에 성공한 뒤에는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두고 서로 싸웁니다.

그들 내부 다툼의 형태는 경쟁입니다. 자본주의는 착취에 바탕을 두고 경쟁에 의해 추동되는 체제입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사악하고 탐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물론 사악하고 탐욕스러울수록 자본가로서 생존하는 데 유리하겠지만 말이지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본을 축적하지 않으면 결국 경쟁자들에게 밀려날 것입니다.

어제 개막식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연설을 들었는데요, 만약 삼성이 이제는 노동자들을 잘 대해 주겠다며 노동자들로부터 추출하는 잉여가치를 줄인다고 한다면, 삼성에 대한 애플의 우위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착취와 경쟁

자본이 이처럼 착취와 경쟁이라는 두 가지 관계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케티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마르크스주의적 좌파들도 자본의 본질이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제국》을 쓴 토니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본을 그저 기생적인 사물로만 봅니다. 그와 별도로 다른 한편에서 사람들이 창조적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자본이 사람들의 창조적 활력을 빨아먹으며 기생충처럼 몸집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은 일련의 적대 관계를 뜻합니다. 이 적대 관계 속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서로 의존하는 동시에 서로 투쟁합니다.

자본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낳는 치명적 결과는 자본주의 체제의 동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케티가 그렇습니다.

피케티가 상정한 자본주의에서는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자본 개념을 이상하게 규정했고, 그래서 그가 말한 자본수익률은 자본주의 역사뿐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자본 개념을 마르크스처럼

이해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 자체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적대 관계에 의해 변해왔습니다. 이 말은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조방적으로, 그리고 집약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적 축적 체제입니다. 자본가들은 경쟁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그 속에서 자본가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노동력·시장·원료를 차지하려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조방적 성장, 즉 양적 확장을 추동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자본주의의 조방적 성장이 일어난 주된 무대는 동아시아였습니다. 그 시작은 남한과 타이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중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제는 베트남과 타이 등지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집약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집약적 성장은 달리 말해, 개별 국가 경제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대중을 자본의 착취적 힘에 더 깊숙이 밀어넣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영국에서 벌어지는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은 착취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이 과정은 위기를 낳기도 합니다. 경제 위기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거나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내재한 장애물입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경제 위기를 설명하는 방식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요인으로 마르크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윤을 저하 경향입니다. 즉, 피케티와는 달리 자본주의에서 자본수익률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등락을 거듭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경제적

결과를 낳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경쟁 때문에 자본가들은 생산을 효율화하는 데 이윤을 재투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수단, 즉 기계류나 기술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집니다. 생산에 로봇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 이 경향의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윤의 원천이 노동자들의 '산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자에 대한 투자보다 전반적 투자가 더 빨리 커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 결과 이윤율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현재 경제 위기의 근저에 있는 현상입니다.

한국 정부든 영국 정부든 하는 얘기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최상위 2천 개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 놓은 돈이 4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달리 말해, 경제가 정체하고 있는 것은 자본가들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본가들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이윤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상호 의존 관계

자본 관계 발전의 동역학에서 비롯하는 가장 근본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본 관계는 자본과 임금노동의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노동자들이 생존하려면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본가들도 이윤을 창출하려면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그리고 특히 위기가 닥치면, 자본과 임금노동 사이의 적대도 마찬가지로 더 커집니다. 이것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특

히 두드러집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조를 만들고 조직화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적대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통치한다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지에서도 이런 적대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거리 시위를 벌이는 일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자본을 관계로서 이해할 때 도출되는 중요한 정치적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본』 코드 풀기》를 쓴 이유는 너무나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을 관계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을 관계로서 이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자본가들이 체제를 배후에서 다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맹목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투쟁합니다. 자본가들이 맹목적으로 쟁투를 벌이므로 자본주의 체제가 불안정에 빠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본주의의 더 핵심적인 관계인 착취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크게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를 전복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본이라는 관계를 끝장내는 것도 바로 이 노동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이 힘을 자각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혁명적 사회주의도 따지고 보면 결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자각하고 사용해서 체제를 무너뜨리도록 돕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정리 발언을 포함한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www.wspaper.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총투표 부결 이후 철도 활동가들 앞에 놓인 과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9월 1~3일 총투표에서 단협 개악 노사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합의는 임금 동결, 복지 축소를 일부 해고자 복지, 강제전출 연기와 맞바꾼 것이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총투표 부결을 통해 이런 실용주의적이고 근시안적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김명환 위원장과 각 지방본부장들은 불신임됐다.

철도공사 경영진은 총투표 부결이 노조 내 '과격파' 때문이라며 악의적 비난을 했다. 하지만 관리자까지 동원해 가결 압력을 행사한 사측의 선동이 먹히지 않은 것은 합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그만큼 광범했음을 보여 준다.

서울과 영주, 제천 등 여러 지역 활동가들이 용기 있게 잘못된 합의를 거부하자고 호소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총투표 부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부결 선동이 활발했던 서울과 영주에서 가장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총투표 부결을 통해 임금과 노동 조건을 공격하는 단협 개악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남아 있는 '정상화 이행' 단협 개악을 계속 밀어붙이려 한다.

지금 철도공사는 8·18 노사 합의 때 관철하지 못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축소' 합의를 노조에 압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퇴직금이나 재해보상 급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줄이려는 것이다.

최연혜를 비롯한 철도공사 경영진은 경영 '정상화' 중간 평가 완수에 실패해 해임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있다. 관리자들을 총동원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이행 촉구' 서명을 받도록 했고, 업무 중인 관리자와 노동자 수천 명을 동원해 노사합의를 촉구하는 '관계 집회'까지 열었다. 심지어 평균임금 축소를 관철하기 위해 '직원 총투표'



총투표 부결은 조합원들의 기세가 결코 꺾이게 아님을 보여 줬다. 활동가들은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사측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조직에 나서야 한다.

까지 하겠다며 현장을 휘젓고 있다.

현재 철도노조 직무대행과 집행부는 새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교섭을 할 수 없다고 사측에 통보한 상태다. 그럼에도 최근 철도노조 중앙위원회가 "평균임금 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한다"고만 정한 채 교섭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합의 시한을 연장해 주고 있어 철도공사 역시 10월 초까지 교섭 압박을 계속 가할 텐데, 철도노조 직무대행은 사측의 압박에 굴복해 평균임금 축소에 합의해서는 결코 안 된다. 철도노조가 스스로 지적했듯이 총투표 결과가 노조 집행부에 대한 "따끔한 채찍질"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철도노조 활동가들과 투사들은 지금 사측의 추가 단협 개악 압박에 반대하고 사측 관리자들이 현장을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항의를 조직해야 한다. 정부가 예고한 '정상화' 2단계 공격이 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열

새누리당은 9월 19일 공기업 호봉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도입, 강제 퇴출 방안 등을 담은 공기업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철도의 경우 정원 유지 의무, 자동승진제 폐지, 전환배치 시 노조 합의, 전보인사 제한 등 핵심적인 단협 개악을 주문했고, '희망퇴직'으로 현재 인원의 10~15퍼센트 감축,

정비·유지보수 업무의 대규모 외주화 방안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기존의 분할 민영화 계획에 더해 철도의 모든 노선 운송 사업에 사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이는 정부의 기존 안보다 더 전면적인 민영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다.

비록 철도노조 집행부의 거듭된 후퇴와 이에 대한 대안 부재로 조합원들의 사기와 단결이 훼손됐지만, 저항을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아니다.

조합원들은 이번 총투표를 통해 결코 기세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님을 보여줬다. 활동가들이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사측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조직에 나선다면 많은 조합원들이 이에 호응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도 현장의 투지나 동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투쟁의 지도력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진정한 문제였다.

따라서 철도노조 활동가들과 투사들은 현장 통제를 강화하려는 사측의 시도에 맞서며 기층의 조직과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부, 지구, 지역 등 각급 단위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각급 총회와 집회 등의 장을 마련해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향후 방향을 토론하고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사측의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더 좌파적인 새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대안도 모색돼야 한다. 조합원들은 새 지도부가 총투표 부결에서 나타난 조합원들의 단협 개악 반대 의사를 따르기를 바랄 것이고, 하반기 철도 민영화 공격에도 맞서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활동가들은 지난 투쟁을 돌아보며 교훈과 과제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어떻게 단결을 강화할 것인가, 지도부가 투쟁을 받아안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측의 공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맞설 것인가 등 올해 투쟁에서 부각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

특히 활동가들은 자신의 지부나 직종이라는 협소한 시야가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과 투쟁을 전진시킨다는 관점에서 철도의 투쟁을 조망하고 계획해야 한다. 협소한 노동조합적 시야는 금세 한계에 직면해 활동가들을 사기저하로 이끌기 쉽다.

활동가들이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도전하려면 국제 노동계급 투쟁의 경험에서 교훈을 배워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와 조직의 필요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정원

부지 매입에 10조 원 쓰면서 정규직화·통상임금 요구 외면하는 현대차

현대·기아차 사측은 여전히 통상임금 문제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 2일 '올해 단협교섭에서 통상임금을 분리하자'는 황당한 제시안을 던졌다. 임금체계·근무체계 문제와 연동해 내년 3월에 방안을 정하자는 것이다. 사측은 시간을 질질 끌어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임금피크제·이중임금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한국전력 부지 매입에 무려 10조 5천5백억 원을 쏟아부어, 더한층 분노가 커졌다. 노동자들에게 한 톨이 아깝다며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를 짓밟고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외면하는



8월 28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현대·기아그룹사 투쟁 결의대회.

자들이, 본사 이전에는 그 많은 돈을 사용했더니 말이다.

울게도 울산공장의 대의원 대표들과 다수 '현장 조직'들은 사측 제시안을 규탄하며, 파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들은 특히 9월 2일 사측 제시안이 나오자마자 즉각 항의를 조직했다. 각 공장의 대의원회들은 깃발을 들고 교섭장 앞으로 몰려가 규탄 시위를 벌였고, 결국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

행부는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항의는 현장조합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꿈수에 타협해선 안 된다", "파업권 없이 협상해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대차에서 잘못된 합의를 하면, 이는 기아차를 비롯해 계열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경훈 집행부가 2일 교섭 중단의 책임이 대의원·활동가들에게 있는 양 비난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경훈 집행부는 우려스런 행보를 해 왔다. 집행부는 잇따라 대의원 간담회, 교섭단 간담회 등을 열어 타협을 설득했다. 대의원 대표와 활동가들에게는 교섭장에서 논의

되고 있는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지 말고, 시위와 화성기 사용 등을 자제하라며 관료적 통제도 시도했다. 심지어 교섭 중에는 교섭위원들의 휴대폰까지 수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조합원들의 불만과 분노는 여전히 높다. 16일 대의원 간담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집행부에 반발했다. 각 공장 대의원회와 활동가들은 이런 불만을 결집시켜 공동 집회 등을 조직하고, 사측을 규탄하며 집행부가 잘못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기아차지부도 현대차만 바라보지 말고, 파업을 재개하고 투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아차의 활동가들이 이를 적극 선동하고 조직해야 한다.

허수영

현대차 불법파견 재판 전원 승소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고무적이게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1백79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4년 만인 9월 18~19일 원고 모두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파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재판부는 그간 법적 논란이 됐던 공정들(도장, 생산관리, 수출선적, 시트, 엔진 변속기, 보전, 차체 등)까지 모두 파견 금지 업무로 규정했다. 1차 하청뿐 아니라, 2차 하청 노동자들에게

도 처음으로 ‘목시적인 근로자 파견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 승리의 주역은 단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10년간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와 투쟁은 완전히 옳았다. 특히 8월 18일 사측과 정규직 지부, 전주·아산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에 합의한 이후에도, 이를 거부하고 싸워 온 노동자들이 옳았다. 현대차 사측은 이 같은 판결이 날 것을 우려해 그토록 악랄하고 집요하게 노

동자들을 이간질하며, 신규채용 합의와 소송 취하를 압박했던 것이다.

법원의 선고 결과를 지켜본 노동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맞았다!”

“이제 걱정을 덜고 또 힘내서 싸울 수 있게 됐다.”

신규채용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울산지회와 아산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투쟁을 확대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울산지회 김성욱 지회장은 이렇게 호소했다.

“사측은 또다시 항소할 것이고, 신규채용과 탄압도 지속할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함께 싸우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아차에서도 현대차와 유사한 신규채용안을 수용하라는 사측의 압박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다시금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신규채용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음을 제시하며 투쟁을 구축해 가자.

박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맞았다!” 지난 18일 법원 선고 직후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투쟁을 다짐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대중공업노조 13년 만에 파업 결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꿈틀대고 있다. 노조는 9월 17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했다.

사측은 지난 수년간 임금을 찢끔 올려주거나 동결하며 노동자들을 쥐어짰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의 분노와 울분도 커져 왔다. “저는 입사한 지 18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15년째 현대차에 다니는 제 친구보다 연봉이 2천만 원이나 더 적어요. 어떤 때는 비애감도 느껴져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노동자들은 턱없이 낮은 기본급에 고통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기본급 7천 원 인상은 노동자들을 분노케 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사측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12년 만에 민주파 후보를 당선시켰다.

특히 올해 들어 노동자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6월 12일 노조가 개최한 집회에 4천여 명이 모였다. 노동자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정병모 위원장이 연단에 오르자, 노동자들은 위원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민주노조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한 중년 노동자는 1987년 투쟁의 기억을 떠올리며



임금을 인상하라! 지난 18일 1천여 오토바이 부대가 현대중공업 공장을 누비며 경적 시위를 벌였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7월 24일 노조 창립 행사에는 참가자가 더 늘어 5천 명 가까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시종일관 연설에 집중했다. “잘못된 임금 정책을 바꾸자”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인상적이게도 이 집회들에는 사내하청지회도 참가했다.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집회에 참가했다. 정규직 노

조의 투쟁은 4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다.

열기

물론 사측은 경영 위기를 강조하며,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9월 1일 고작 기본급 1만4천 원 인상, 월차제도 폐지 등의 안을 제시했다. 노

조는 즉각 이것이 “가만히 앉아서 임금 7~8만 원 도둑맞는” 개악안이라고 규탄했다.

9월 2일 임단협 보고대회에 모인 노동자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는 그동안 우리한테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요. 임단협 때마다 ‘적자네’, ‘불경기네’ 했지만, 다들 올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노동자들의 분노는 9월 17일 대의원대회에도 반영됐다. 사측에 친화적인 대의원들이 다수였지만, 아무도 감히 투쟁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대의원들이 잘못 했다가는 현장에서 ‘역적’ 소리 들읍니다.”

“이제는 협상만으로는 안된다는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의원대회 다음날 노동자 1천여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장을 돌며 경적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의 참가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노조가 준비한 주유 티켓이 모자랄 정도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 첫날 다시금 대규모 집회를 열어 열기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김지태

기후정상회의를 겨냥한 전 세계적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데이브 수엘

UN 기후정상회의가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리기 이를 전인 9월 21일, 기후변화에 맞선 전 세계적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정치인들은 거의 20년 만에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 협약을 내년 파리에서 채택해야 하는데, 이제 겨우 1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UN 사무총장 반기문은 이번 뉴욕 회담을 소집했다. 올해 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릴 예정인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외에 추가로 잡힌 일정이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미약한 목표에 대해서조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기후 과학을 살피는 UN 기구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과거의 보고서들보다도 더 암울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IPCC는 온실가스를 신속히 규제하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극지방의] 해빙, 강수와 기상 패턴의 변화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 과학에 의문을 품거나 행동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수준의 일만 하려 든다. 회담 참가자들의 면면도 이를 반영한다.

1백 명 이상의 국가 지도자들이 회담에 참가할 예정인 반면, 오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몇몇 나라들과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은 하급 장관을 보낸다. [박근혜는 참가한다.]

이런 나라들 중에는 캐나다, 호주처럼 자국 경제에서 점점 화석 연료 개발 비중이 커지는 나라들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있다.

대자본

회담에는 유니레버, 맥도날드, 월마트, 목재·석탄·석유·금융 대자본의 고위 인사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중국 상무부총리 장가오리와 함께 기후 문제 해결사 행세를 하려는 듯 보인다. 그러나 2009년 코펜하겐에서 주요 협약을 맺으려던 가장 최근의 노력을 좌절시킨 장본인이, 바로 오바마와 이를 거든 중국이었다.

오바마는 미국 발전소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생색을 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석탄을, 수압파쇄기법을 동반하는 셰일가스로 대체하는 데 의존한다.

셰일가스가 개발 과정에서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내는 메탄 가스를 배출하는 등 환경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국내 석탄 소비량이 줄었지만 해외 수출량이 늘었다. 오바마 덕분에 말이다. 오바마 정부는 국유지를 석탄 기업에 싼 값에 빌려주고, 자연보호구역 내에서의 거대한 신규 개발 계획을 법원에서 통과시켜 주고 있다.

시위대는 미국 전역에서 버스 4백여 대와 기차를 타고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민중행진’(People’s Climate March)에 모여들 것이다. 이들은 급격한 방향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시위 조직자는 전 세계에서 1천5백여 개의 연대 행동이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21일에 베를린, 보고타, 뉴델리, 이스탄불, 요하네스버그, 라고스, 멜버른, 파리, 리오데자네이루, 런던 등에서 행진이 벌어질 것이다. 맨체스터, 세펠드, 요크셔 서부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21호 / 번역 김준호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이 글은 8월 29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하단 사진)이 강연한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게 지난해 12월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해 왔던 거고요.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나왔던 계열회사,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거예요. 의약품, 의료기기 같은 의료부문, 화장품, 건강식품, 호텔, 여행, 온천, 목욕탕, 이런 것들에 대한 자회사를 확대한 게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죠.

6차 투자활성화대책 내용을 보면 하나는 영리자법인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설치하겠다, 즉 영리병원을 설치하겠다. 셋째,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 넷째,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다. 다섯째, 연구 활성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영리병원

제일 먼저 볼 건 싼얼병원입니다. 싼얼병원은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그룹이래요. 설립 주체가 차이나시스템셀(China Stem Cell), 즉 아예 이름에 스템셀(줄기세포) 치료를 내세우다가 CSC라는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차이나무슨 헬스 그룹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병원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겠다고 했죠. 투자금액이 5백억 원이고 48병상 규모에 피부 성형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분야도 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정부는 이걸 제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싼얼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미용·성형 수술을 하다가 혹시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싼얼병원은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에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돼요. 따라서 다른 병원과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제주도에 있는 한라병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라병원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뒤집어 쓰겠구나 생각하고 [계약] 안 하겠다고 했어요. 한라병원은 우리 나라 1호 메디텔을 지으려고 하는, 돈 버는 데 눈이 벌게 있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조차 싼얼병원하고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큰코다치겠네 하고 생각해서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니네는 안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장관이 싼얼병원을 다시 허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싼얼병원은 바뀌었을까요? 더 안전해졌을까요? 저희가 찾아보니 회장이 ‘중대한 경제사범 혐의로 텐진시 공안국에 형사 입건’되었고, <뉴스타파>에 보도된 대로 구속돼 있었죠. 싼얼병원



싼얼병원 유치 실패는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앞뒤 가리지 않고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지 보여 준다.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경제 위기의 심각함,
또는 병원 자본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건의료를 확실히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의 최대 주주인 싼얼바이오와 광업투자, 이게 지난해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모기업인]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싼얼병원만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라병원이 안 되니까 제주도의 다른 병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싼얼병원과 응급실 거리가 38킬로미터

더라고요. 응급이라면 38킬로미터를 도대체 어떻게 가야 돼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결국 복지부도 싼얼병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있어요.

문제를 처음 다룬 것은 <뉴스타파> 인데요. <한겨레>가 이번에 싼얼병원을 취재했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 치료가 주로 줄기세포 치료인데, 한 사람당 1년에 1억 원을 받는대요. 주사 한 번에 1천만 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48병상으로 5백억 원을 투자해서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판단으로는 싼얼병원이 중국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걸 한국에 와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일본과 중국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있고 지금은 몇 개는 문을 닫고 몇 개는 음성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병원들을 지금 영리병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중국인 사기꾼에 한국 국가가 놀아난 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의료 민영화라는 게 바로 이

런 꼴이에요. 마치 미국의 최고급 병원을 한 번에 쫓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중국에서도 허용되지 않은 걸 한국에 들여오는 것이 바로 의료 민영화의 실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하나 들여놓기만 하면 다른 것도 들어올 거고 국내 영리병원이라는 물꼬도 터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싼얼병원을 들여오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걸까요? 하나는 경제 위기의 심각함, 또는 병원 자본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건의료를 확실히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실례를 만들어 보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에요. 즉, 반대 운동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며 지푸라기를 잡았는데 그게 완전히 썩어 빠진 동아줄이었다는 거죠.

외국인 영리병원은 요즘 말로 하면 ‘외국인 영리병원’이라고 쓰고 ‘국내 영리병원’이라고 읽어야 돼요.

처음에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외국인 편의시설로 영리병원을 들여온다고 했어요. 외국인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외국인 주재원들이 많이 올 테니까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영리병원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기업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도 먼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병원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외국인에만 한정해서 그렇다, 국내 사람도 [진료] 보게 해 주자 이

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외국 환자가 최소한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아예 제한이 없어졌어요.

외국인 의사 비율도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이면 된다는 걸로 완화됐는데, 제주도에서는 외국인 의사가 있으면 된다는 정도로 풀렸어요.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몇 개였습니까? 세 개였어요. 인천, 부산, 광양. 그러다가 이게 여섯 개로 늘었죠. 지난해에 두 개가 더 늘어서 여덟 개가 됐죠. 이제는 모든 도에 다 있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번 영리병원 허용 방안은 경제자유구역에 만들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미FTA 역진방지규정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일단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이를 되돌릴 수 없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

이번 6차 투자활성화대책의 보건의료 부문의 핵심은 대학병원의 영리자회사, 의료기술지주회사 문제일 거예요.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는 정부가 의료법인(중소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할 뿐이라고 주장했었죠. 그랬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대학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산학협력법에 현재로서는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을 하나씩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 발표했더니 제일 먼저 반대한 게 어디였을까요? 의대 빼고 다였어요. 의과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을 따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인가?

녹취한 것이다. 본지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만들겠다고 할 거거든요. 지금은 의대가 돈 벌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이 지가 알아서 돈 벌고 지가 알아서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교수한테 스톡옵션도 주겠다고 하나까 다른 대학들이 모두 반대했어요.

딱 한군데, 제대로 싹 정리가 된 데가 있는데 그게 어느 대학일까요? 기술지주회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장 침착하게 대응한 대학이 서울 종로구에 한군데 있어요. 성균관대학교죠. 성균관대는 이미 의료기술, 융복합대학원을 2011년부터 띄워 놔고, 독자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만들 준비를 해 놔어요.(그림 참조)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른바 ‘HT보고서’에서 삼성은 의료기술지주회사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의료가 산업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요.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 의료기술지주회사, 간단히 말해서 대학병원 중심의 영리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은 이걸 또 어디에서 배겼을까? 이걸 1980년도에 만들어진 미국의 베이-돌 법에서 베낀 거예요. 베이하고 돌이라는 두 상원의원이 만든 특허법 이름인데요. 정부가 재정을 대서 만들어진 기술을 특허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법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한 법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히 말해 볼게요.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피부과 교수예요. 그런데 대머리에 머리를 나게 하는 신비의 명약 특허를 제가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특허청에 특허를 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어요.

특허를 받으려면 실제로 뭔가 특별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고 따라서 특허를 낸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대머리에 머리털 나는 약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허는 몇 천 개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한국의 특허청은 특허를 신청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진짜 유용해야만 특허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명약에 내는 것이 아니라 돈 될 만하다 싶으면 아무거나 특허를 내줘요.

그것도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회사를 수십 개를 거느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자회사 설립 규정도 바꾸겠다고 했는데 기술지주회사의 의무출자비율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춰 주고, 이 보유 비중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 자회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어요. 자기 출자지분이 10퍼센트만 되면 되니까 열 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5년간 유예해 주면 수십 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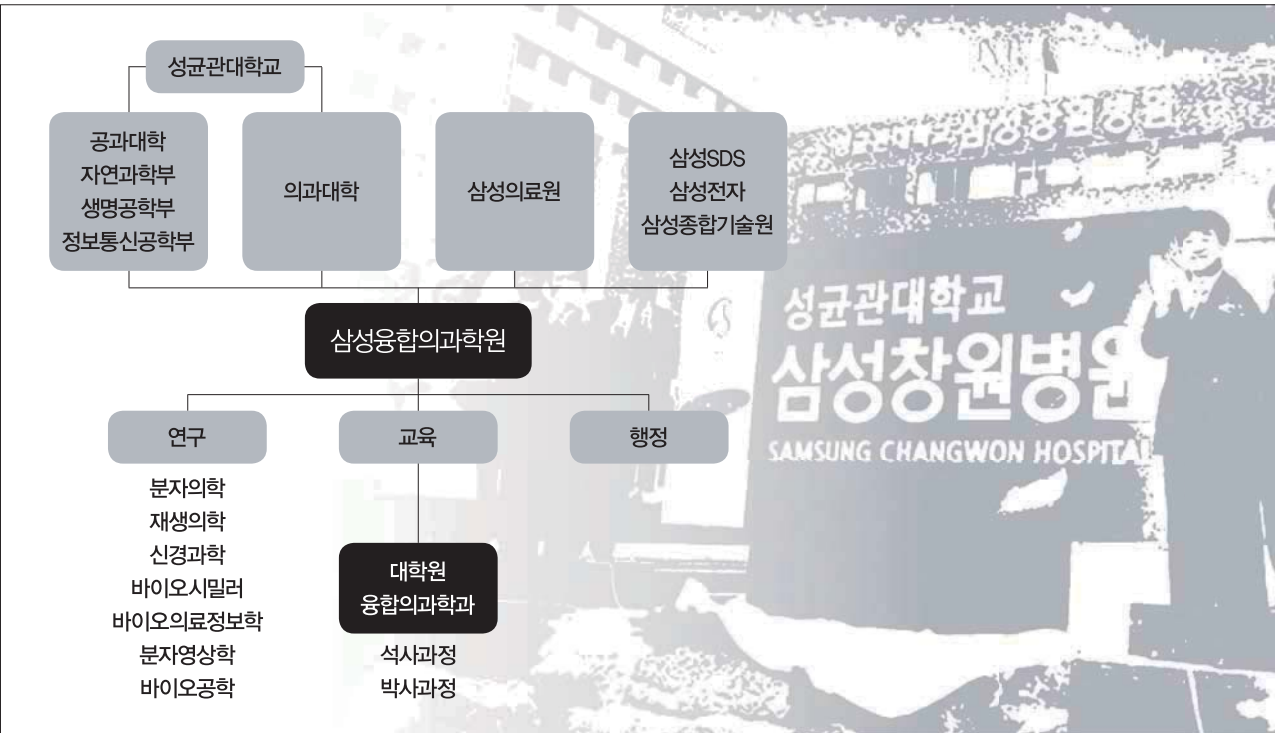


그림)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융합의과학과 “삼성 이명박 정부 말에 이미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회사의 스톡옵션을 가지는 것도 허용해 줬어요.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스톡옵션을 가지게 되면 이 교수는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이죠? 그 약을 엄청나게 처방하는 게 이득이죠.

제가 머리털 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개발돼 있고요. 모공치료나 무릎 관절에 스크루[나사못]를 박는 특허 [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특허에 자기 이름을 써 넣고 이걸 자기가 계속 처방을 하고 계속 쓰면 쓸수록 수입이 늘겠죠.

이것이 바로 미국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진 이유입니다.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 배가 높죠.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수술법이나 진단법에 돈을 내고 받죠. 심지어 미국 내에서는 연구나 학습 목적으로는 돈을 내지 말게 하자는 예외 규정을 뒤야 할 정도예요.

베이-돌 법이 끼친 다른 효과는 아무거나 특허를 내게 된 거예요. 미국의 특허청도 특허를 많이 내주면 내줄수록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약 특허의 75퍼센트 이상이 불필요한 특허라는 ‘특허 폭탄’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해외환자 유치

의료관광은 미국 환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받는 게 써서 생긴 거예요. 미국에서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만들어진 게 의료관광이고 국제의료예요. 미국 의료비보다는 싸지만 자기네 나라 의료비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걸 활용하기 위한 거죠.

이걸 태국이 열심히 추구했어요. 처음에는 싱가포르가 1등이었죠. 그다음에 태국이 1등이 됐어요. 태국이 1등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 1년에 2백만 명 온다고 자랑하죠. 그렇게 해서 GDP의 0.4퍼센트를 벌어요.

그런데 태국의 맹장염 치료 가격이

1년에 15퍼센트씩 오르고 있어요. GDP의 0.4퍼센트를 벌려고 태국 의료가 망했습니다. 또 의료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영리병원들이 월급이 높으니까 태국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다 몰리죠. 태국 농촌에서는 의사 구경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도시에서도 실력 좋은 의사를 만나려면 외국병원에 가야 돼요.

태국이 왜 미국보다 의료비가 싸까요? 기본적으로는 임금이 싸서 그래요. 한국과 태국이 가격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 노동자 임금을 10분의 1로 낮춰야 돼요. 그래서 태국 다음으로 떠오르는 주자가 인도예요. 임금이 태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한국이 뛰어들겠다? 이거야 말로 웃기는 일이고 거기서 진짜 잘 된다면 한국 의료가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외환자 유치는 핑계라는 거예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제일 많이 오는 환자는 미용·성형이죠. 지금도 그냥 잘 오잖아요. 국내 제도를 변화시킬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해외환자 유치를 내세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바로 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어려운 애긴데요.

자, 내가 S생명사예요. S대학병원에 내가 환자를 보낼 수 있고 그 돈을 내가 병원에 직접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병원과 직접 계약을 맺기를 원해요.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실손형 보험들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병원하고 보험사가 직접 해결하나요? 여러분이 받아서 주죠? 그런데 미국은 병원과 보험사가 직접 해결해요. 직접 해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병원한테 지침을 내려요. 뇌막염으로 소아 환자가 오면 3일만 치료해라. 그리고 열이 펄펄 나도 그냥 퇴원시켜라. 나머지는 돈을 못 준다. 그러면 병원은

돈을 못 받으니까 어린이를 그냥 퇴원시켜야죠. 이게 바로 영화 <식코>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나라도 건강보험이 있긴 하지만 실손형 보험이 거의 의료비의 약 50퍼센트를 지불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보험회사가 병원한테 돈을 직접 주게 되면 병원이 보험회사 눈치를 봐야 해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의료법상 보험업자가 환자 유치·알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병원들과만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 병원 안 가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병원에 유치·알선하고 직계약을 맺으면 자기한테 줄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겁이 되고 병원이 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예 귀찮아서 보험사가 병원을 사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HMO[건강관리기구,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예요. 미국도 처음에는 계약 관계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보험사가 병원을 샀어요. 심지어 보험사가 한 지역 전체 병원을 사고 그걸 시스템을 구성하는 걸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해외환자 유치해서 버는 돈은 우리 나라 전체 보험 매출액의 1퍼센트도 안 돼요. 사실은 영리자회사와 영리병원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해외환자가 아니에요. 해외환자는 유치해서 돈을 벌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거예요.

임상시험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을 제일 많이 하는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아세요? 서울이래요. 다른 나라보다 두 배 싸고, 속도는 두 배 빠르고,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아 본 사람들이 많다. 이게 [세계 최대 제약회사 파이저의] 보고서에도 나올 정도예요.

또 한국처럼 대형병원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암 환자로 딱 찬 2천~3천 병상의 병원이 몇 개가 있는 거잖아요? 아시아 최대 병원. 최고 병원이 아니고 최대 병원. 그런데 암 환자로 딱 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하나? 줄기세포는 건강한 사람한테 안 해 보고 그냥 환자한테 직접 임상시험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돈 받고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싼알병원이 뭘 하건 합법이 되는 거예요. 메디포스트나 알앤엘바이오나 이런 회사들이 주식 대박이 나겠죠.

줄기세포 치료제는 한국에서 허가 난게 네 개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줄기세포 유래제품이 단 한 개, 그것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가 났고, 줄기세포 치료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게 FDA[식품의약국의 줄기세포 항목의 주된 내용이예요. 한국에서 허가받은 네 개의 치료제 중에 미국 FDA 통과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연구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도 임상시험 중에 암이 생겼다는 보고서가 학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전자 치료는 더하죠. 바이러스가 들어 있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유전자 치료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도 허가된 바가 없고, 계속해서 이상한 보고만 나와요. 유전자 치료를 했더니 암 생겼더라, 뭐 생겼더라. 그런데 이걸 연구라는 명목으로 임상시험을 대폭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의료기술이라고 특허를 내고 영리자회사로 만들어서 교수들이 스톡옵션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의료괴담이 되는 거죠.

결론

4차 투자활성화방안이 대략적인 내용을 제시했다면 6차 투자활성화방안은 확실하게 미국식 의료 민영화라는 방향을 보여 주는 거예요. 노골적이고, 구체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두른 티가 역력해요.

복지부는 최근까지도 싼알병원 회장이 구속된 걸 몰랐어요. 포퓰에서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회장 구속되었다는데 아세요?” 했더니 복지부가 “그래요?” 할 정도였어요. 그날 저녁에 <뉴스타파>가 그 사람한테 회장 구속됐는지 알았냐고 하니 까 “알고 있었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도 허가를 내 줘?” 이렇게 보도가 나갔죠.[웃음]

또 중소병원만이 아니라 대형병원, 그리고 보험사, 제약, 의료기기 업체까지 같이 하는 전체적인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총괄적인 의료 민영화 계획이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더 전면적이고 치열해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녹취 박충범

